

상습침수 피해 주민들 “지자체 뭐했나” 분통

광주 남구 주월·백운동 주민들 “원인 파악도 않고 대책 소홀” 오늘 또 비 예보 망연자실... 남구 “하수관거 공사 시에 요청”

폭우가 또다시 내린 지난 31일 오전 광주 남구 주월동 일대는 성인 남성의 허리 부분까지 잠겨 있었다.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각 주택 대문 앞에는 모래주머니가 쌓여 있었지만 역부족이었다. 가정집 내부에는 이미 들어찬 물로 냉장고, 가재도구 등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떠다니고 있었다. 빗물이 빠져나가지 않 할 우수관 입구에서는 오히려 물이 솟아오르면서 집안 곳곳을 뒤어내는 주민의 얼굴에는 그늘이 졌다.

같은 시간 남구청사 앞 백운동 일대 대문대에도 차량 바퀴가 잠길 정도로 물난리를 겪었다. 차량들이 움직일 때마다 파도가 치듯 물이 인도쪽으로 넘쳐 흐르면서 사람과 차량 모두 통행에 차질을 빚고 있었다.

주민 이미정(여·47·주월동)씨는 “수해를 입은 지 나흘 만에 다시 집이 침수돼 당장 입을 옷은 물론 잘 곳도 없어 걱정이야”며 말끝을 잊지 못했다.

김모(여·40)씨는 “15년째 살고 있지만 이번처럼 안방까지 물이 찬 적은 지난 27일과 이번 폭우가 처음이다”면서 “남구청에 전화해도 인력이 부족하다는 말만 되돌아오고 모래 주머니도 주택이 아닌 상가쪽부터 나눠 주는 바람에 미처 대비를 하지 못해 피해가 더 컸다”고 울먹였다.

지난 27일에 이어 31일 잇따라 물난리를 겪은 남구 백운·주월동 주민들 사이에서 분통이 터져나오고 있다. 주민들은 이미 폭우가 예보된 상황에서 남구의 미흡한 대책으로 4일 만에 똑같은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남구측은 지하철 2호선 공사라 겹쳐 하수관 확충 공사를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근본적인 원인 해결은 사실

상 손놓고 있다. 2일 광주지방기상청·남구 등에 따르면 지난 31일 시간당 최고 61mm 폭우가 쏟아지며 남구 주월동 일대 상가와 주택, 차량 등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주민들은 폭우 전날인 지난 30일 시간당 최대 40mm 이상의 장대비를 기상청이 예보해 충분히 수해를 대비할 시간이 있었지만 남구청이 이를 소홀히 해 화를 키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설상가상으로 3·4일 이틀간 최고 60mm 집중호우가 예상돼 주민들은 망연자실하고 있다.

광주 남구 주월동에 모 빌라에 살고



물바다 된 주택 시간당 최고 61mm 비가 쏟아진 지난 31일 오전 광주 남구 주월동 일대 주택, 차량 등이 물에 잠기는 등 물에 두어번째 침수피해가 발생했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있는 최모(여·47)씨는 “광주시와 남구청은 현장에서 겪는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이번 폭우는 미리 예보돼 있었음에도 자치단체의 능동 대응으로 방치해 발생한 인재(人災)였다”고 주장했다.

남구청과 광주시는 주월동과 백운동 일대에 잇따라 발생한 침수 피해에 대해 정확한 원인 조사는 물론 앞으로의 폭우에 대해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좁은 하수관거를 원인으로 추정하면서도 앞으로 들어설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과 겹쳐 확충 공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남구 관계자는 “지난해 백운고가·농성광장 1.4km 구간에 대해 시간당 70mm의 비를 버틸수 있는 하수관거 공사를 하면서

상습침수지역인 무등시장이 이번엔 폭우에는 피해가 없었다. 이번 침수는 남구청 입구-방림지구대 500m구간에 설치된 좁은 네모난 하수관로 2개(너비 2.5m 높이 3.0m, 너비 2.0m 높이 3.0m)가 50mm의 한계치를 넘어 빗어진 현상으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시에 도시철도와 별개로 70mm의 비를 버틸수 있도록 추가로 2개(너비 2.5m 높이 3.0m)의 하수관거 공사를 요청했으며 앞으로 집중호우에 대비해 우수관 입구 등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해명했다.

지난 31일 내린 집중호우로 광주 남구에서는 상가 70곳, 주택 25채, 도로 2곳, 차량 2대 등 모두 103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순천시 우즈벡 근로자 3명 추돌사고 사망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30대 외국인 노동자 3명이 뒤에서 승용차가 들이받는 사고를 당해 모두 숨졌다.

2일 새벽 5시에 순천시 대룡동 평화병원 인근 대룡사거리 편도 2차로 도로(별교 방면)에서 A(33)씨가 운전하는 제네시스 승용차가 앞서 주행하고 있던 오토바이 뒷부분을 추돌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 B(31)씨 등 우즈베키스탄 국적 30대 외국인 3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모두 사망했다.

경찰 조사 결과 승용차 운전자 A씨는

음주단속 기준에 못미치는 혈중 알코올 농도 0.03% 수치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주변이 어두워 앞서 가던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B씨 등은 3년간 체류하며 취업활동이 가능한 취업비자를 통해 지난해 입국했으며 순천에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식을 통해 사고 당시 A씨 승용차의 과속 여부와 목적지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딸 다쳤다는 소식에 음주운전한 가장 선처

2심서 벌금형 선고

법원이 딸이 다쳤다는 소식을 듣고 음주운전을 한 30대 회사원에겐 1심 형량보다 가벼운 벌금형을 선고했다.

광주고법 형사1부(최수환 부장판사)는 특수공무집행방해·공용물건손상·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38)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박씨는 지난해 4월 밤 목포시에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36%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친구와 술을 마시던 박씨는 딸이 다쳤다는 아내의 연락을 받고 집으로 급하게

돌아가던 중이었다.

박씨는 단속에 붙음하고 도주하다가 자신의 차를 제시하는 경찰차를 3차례 들이받은 뒤 붙잡혔다.

1심에서는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경찰의 정당한 직무를 방해하는 등 죄질이 나쁘지만, 딸이 다쳤다는 연락을 받고 다급한 마음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참작,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여기에 박씨가 3자녀(12세, 10세, 3세) 가장인 점을 추가로 고려, 벌금형을 선택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파손된 경찰차 수리비를 모두 배상했으며,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면서 “어머니, 아내, 3자녀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인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벌초하던 50대 벌에 쏘여 숨겨

추석을 앞두고 부모 산소를 벌초하던 50대가 벌에 쏘여 숨졌다.

2일 여수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15분께 여수 화양면의 한 주유소 뒤편 야산에서 벌초 작업을 하던 A(59)씨가 벌에 쏘였다. 호흡근단을 겪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에

의해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현장에서 사망했다.

여수시에 거주하는 A씨는 당시 추석을 맞아 형(70)과 함께 오전 9시부터 부모 산소를 벌초하던 중 벌에게 공격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도 함께 벌에 쏘였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수=김창화 기자 chkim@

상습 음주·고성방가 50대, 따지러 온 이웃에 ‘인분 세례’



○...상습적으로 음주와 고성방가를 해오던 50대가 자신의 집으로 따지러 온 이웃의 얼굴에 인분을 묻히고 폭행까지 해 경찰서행.

○...2일 광주광안경찰에 따르면 박모(56)씨는 지난달 30일 오후 4시 35분께 광주 광안구 모 아파트 2층 복도에서 자신을 찾아온 임모(47)씨와 시비가 붙

어 임씨의 얼굴에 인분을 묻히고 뺨을 4차례 때렸다는 것.

○...박씨는 이날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임씨가 현관문을 두드리자 손에 인분을 묻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박씨는 경찰에서 “서로 고성인 오가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실수했다”며 선처를 호소.

/김한영 기자 young@kwangju.co.kr

김영록 전남지사 선거법 위반 무혐의

김영록 전남지사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지난 31일 광주지검 목포지청 등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김 지사는 더불어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ARS 녹음파일을 일반 유권자에게 보내 지지를 호소,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공직선거법은 당내 경선에서 일반인에게 육성으로 녹음된 ARS 전화를 이용, 지지를 호소할 수 없도록 했다.

검찰은 “법률상 해석에 있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또 김 지사가 선거관리위원회 질의를 하고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문을 받아 녹음파일을 보낸 경우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경선 과정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상대 후보로부터 고발됐다.

김 지사는 이에 대해 “녹음파일을 보낸 건 사실이지만 경선 과정에서 당원들 중심으로 보낸 것이다. 선거 캠프 종사자가 선거관에 확인도 했다고 해서 전소했고, 여기에 관여하지 않았고 고의도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목포=김병관 기자 dss6116@

8개월 아들 때려 숨지게 한 엄마 징역 10년

생후 8개월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엄마가 살인이 아닌 아동학대치사죄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송승훈 부장판사)는 지난 3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8·여)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론 살인의 고의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며 “피해자를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부분만 인정해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범행 당시 다이어트약 복용으로 인한 우울 장애를 앓아 심신 미약 상

태였다는 A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료 기록을 보면 A씨가 수년에 걸쳐 같은 약을 복용하면서 우울증을 호소한 적은 없다”며 “피해자가 죽은 뒤에 인터넷에 신생아 폭행 사망 사건을 검색하는 등 범행 당시 사물 변별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나이 어린 피해자는 방어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죽기 직전까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고 소중한 생명이 없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숨진 뒤에도 시신을 은닉하고 입양을 검색하는 등 범죄를 숨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나주 혁신도시, 무안 기업도시보다 부동산 투자 가치가 훨씬 높은 곳!!

개발 공사가 진행중인 광주인접 국가산단에 투자하거나 공동중개 하실분 상담환영!!

(주)가은중개법인
062-225-0312

